

<서 평>

## 제주 4·3의 바른 이름을 찾아서

- 제주 4·350주년 범국민위원회의 『제주 4·3 연구』(1999, 역사비평사) -

양 조 훈\*

제주 4·3은 한국전쟁 다음으로 희생자를 많이 낸 민족의 비극이자 현대사의 질곡이다. 전쟁상황도 아니었는데도, 제주 섬이란 좁은 땅덩어리에서 3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희생되었다. 희생자 숫자도 엄청나지만, 그 참절의 유혈극이 남긴 심리적 외상은 너무도 깊다.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간직한 채 숨을 죽이고 살아가는 4·3 피해자와 유족들이 엄존하고 있는데도 반세기에 이르도록 이 나라와 이 사회에서는 이를 방관하거나 외면해왔다. 그 부도덕한 무리 속에는 학계도 예외일 수 없다.

물론 반공과 독재로 무장한 역대정권은 4·3을 ‘공산폭동’으로 매도하며 철저히 금기시해 왔다. 그들은 자신들이 왜곡하고 조작한 자료들만 이 세상에 남기를 강요하며, 4·3을 제주 섬에 가두어 들려고 했다. 그러나 진실을 손바닥으로 막을 수는 없는 일이다. 80년대 후반부터 지역언론과 4·3연구소, 그리고 뜻 있는 문인과 학자들에 의해 금기의 벽을 뚫려는 작업들이 시작됐다.

그로부터 10년만에 우리는 비로소 4·3문제를 다양한 학문적 접근으로 해부한 종합적인 연구서적을 만나게 되었다. 그 책이 바로 제주 4·3 제 50주년 기념사업추진 범국민위원회가 간행한 『제주 4·3 연구』(역사비평사·486쪽)이다. 이 책은 역사문제연구소·역사학연구소·한국역사연구회와 제주4·3연구소가 공동 참여하여 엮어냈다고 밝히고 있듯이, 한국 역사학계가 처음으로 ‘4·3 진실 찾기’에 공을 들인 성과물이기도 하다.

\* 전 제민일보 편집국장

이 책은 역사학자, 정치학자, 법학자, 인류학자, 의학자, 문학평론가, 신문기자 등 다양한 분야의 필진 11명의 글로 엮어진 것도 눈길을 끌게 하는 대목이다. 이로써 4·3에 대한 역사적 평가도 여러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더하게 한다.

또한 집필자들의 면면을 보면, 제주출신 학자보다도 육지출신 학자들이 훨씬 많은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육지출신 학자만 8명이 참여했다. 서문에서 밝힌 '육지 학자들이 뒤늦게나마 사죄하는 마음에서 글을 모았다'는 표현이 오히려 작은 감동을 준다. 섬과 육지가 하나임을 확증하는 학자들의 연대의식에서 만들어졌다는 이 책에 실린 글과 필자를 소개한다.

· 1920년대 후반 제일 제주인의 민족해방운동 - 김인덕(국가보훈처 보훈연구실 연구원)

· 주도세력을 통해서 본 제주4·3항쟁의 배경 - 양정심(역사학연구소 연구원)

- 제주 4·3의 역사적 의미 - 서중석(성균관대 사학과 교수)
- 제주 4·3당시 계엄의 불법성 - 김순태(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 제주 4·3항쟁과 미 군정정책 - 정해구(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제주 4·3항쟁과 우익 청년단 - 임대식(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
- 근대성과 폭력: 제주 4·3의 담론정치 - 김성례(서강대 종교학과 교수)
- 폭력과 권력, 그리고 민중 - 김재용(원광대 국문학과 교수·문학평론가)

· 의학사(醫學史)적 측면에서 본 4·3 - 황상익(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 4·3 이후 50년 - 김종민(체민일보 기자·4·3취재반)

· 제주 4·3과 한국현대사 - 박명림(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실장)

김인덕·양정심·서중석 씨의 글은 4·3에 대한 역사학적인 접근의 논문들이다. 1920년대부터 1948년 4·3이전까지의 제주지역 민족운동사와 인민위원회의 활동, 3·1절 발표사건이 미친 파장, 그리고 남로당 제주도

당의 독자적인 봉기결정 과정 등을 조명, 4·3 발발 배경을 살폈다. 서 교수는 단선단정 반대운동이 육지부에서도 일어났으나, 유독 제주 섬에서 엄청난 양민학살의 희생을 치른 데에는 이승만 정권만이 아니라 미국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미군정의 오류에 대해서는 정해구 씨의 글에서도 신랄하게 비판되고 있다. 미군정은 제주도 특유의 민중적 삶에 대한 이해나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모든 것을 좌과세력의 선동이라는 단색 안경만으로 바라보는 시각으로 강경 탄압정책을 시행, 결과적으로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김순태 교수의 글은 제민일보 4·3취재반이 제기했던 4·3 계엄령의 불법성을 학문적으로 뒷받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 교수는 일각에서 일제시대의 계엄령을 4·3 계엄령의 법적 근거로 삼으려는 견해에 대해 “지나친 형식논리이며 건강부회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4·3 당시의 계엄령은 법적 근거도 없이 행해졌다고 주장한 그는 당시 토벌대의 학살극은 어떠한 식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만행임이 분명하다고 역설했다.

이 책에서 또 눈길을 끄는 논문은 의학사를 전공한 황상익 교수의 글이다. 정신의학적으로 분석한 황 교수는 초토화작전이 전개된 1948년 10월 하순부터 이듬해 3월까지를 ‘집단광기의 시대’라고 기술했다. 인간의 탈을 쓰고 도저히 저지를 수 없는 악행과 만행에 대해 그렇게 라도 표현하지 않을 수 없음을 탄식한다. 그는 ‘빨갱이’라는 단어를 대할 때마다 ‘문둥이’라는 말이 떠올려 진다면서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빨갱이’는 애당초 실체가 없는 것이기에 문둥이보다도 훨씬 파괴적이다. ‘빨갱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라’는 협박 앞에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다른 ‘빨갱이’를 만들어내고 탄압하는 길 이외에는…”

문화인류학적인 측면의 접근을 시도한 김성례 교수의 글은 4·3의 역사적 진실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으나, 무고한 죽음을 영혼의 울음으로 재현하는 제주의 굿이야말로 그날의 참상을 공공연하게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라고 주장한다. 임대식 씨는 제주도민들의 너리

에 아직도 악몽의 대상으로 남아있는 서북청년단의 활동을 분석하면서 “그들 역시 미군정과 극우세력에게 이용당한 측면이 있다”고 새롭게 주장, 앞으로의 연구과제를 던졌다.

문학평론가 김재용 교수는 4·3문학의 쌍봉 현기영과 김석범의 문학세계를 분석하면서 4·3문학의 지향점은 분단한국의 모순을 극복하고 통일한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진단한다. 1988년 4·3연구로 고려대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바 있는 박명림은 민주화이후 지금까지 4·3에 대한 우리 사회의 수용은 어떠했으며,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가는 물음을 던지면서 4·3이 한국현대사에 차지하는 위치를 점검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인들이 4·3을 정직하게 대면하기 위해서는 휴머니즘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10여 년 전부터 4·3현장을 빈틈없이 발로 누비며 가장 민을만한 4·3 실록을 엮어내는 김종민 기자의 글은 ‘4·3 진실 찾기 50년’의 보고서이다. 제주도민들은 지난 50년 동안 진상규명을 위해 어떤 일들을 했는가를 살피며, 4·3역사를 조각하고 왜곡한 사례들도 구체적으로 추적 해부한다. 또한 취재현장에서 체득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4·3이 제주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심도 있게 분석했다.

이 책은 학계와 언론계의 다각적인 연구 성과물을 집약, 4·3 논의의 폭을 상당히 넓혔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크다. 그 동안 실록 편찬과 증언집 등과 같은 1차 사료 발굴에 치중해 왔던 4·3연구가 이번에 각 분야별 전문 연구자들의 참여로 인한 본격적인 연구서적이 발간됨으로써 학문적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책은 문화관광부가 선정하는 1999년 역사부문 우수학술도서로 뽑혔다. 정부기관에서 4·3을 소재로 한 연구서적을 우수학술도서로 선발한 것 자체가 이채롭다. 그만큼 이 책의 무게를 더해주는 동시에, 연구내용에 대한 신뢰가 높음을 공인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이 연구서적은 그러나 4·3에 대한 이름을 붙여주지 못했다. 일부 연구자들은 ‘제주 4·3 항쟁’이란 표현을 썼지만, 책제목은 여전히 꼬리표가 없는 『제주 4·3 연구』였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제주 4·3 범국민위원회

공동대표 김종배 선생은 간행사에서 4·3의 정명(正名)을 찾자고 호소했다. 과연 제주 4·3의 바른 이름은 무엇인가.

나는 1988년 4·3취재반장을 맡았을 때, 이 문제로 심히 고민했다. 그 당시에도 '공산폭동'이니 '민중항쟁'이니 하는, 그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는 용어가 난무했다. 나는 1989년부터 신문연재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꼬리표가 없는, 단순히 '4·3'이란 이름을 썼다. 속단과 예단을 버리자는 뜻에서다. 다만 제주땅에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으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밝혀내면 4·3의 성격은 스스로 규명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4·3을 말하기보다 4·3이 말하게끔 하는 전략을 취했다는 이야기다. 『4·3은 말한다』는 이름도 그렇게 해서 붙여진 것이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역사는 제주 4·3에 어떤 이름을 붙일 것인가. 나는 단언하건대 세월이 흐를수록 4·3에 씌어진 붉은 색의 꺼풀들은 하나씩 벗겨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데올로기문제로 너무 과대포장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남게 되는 게 제주도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항쟁과 대학살의 문제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용해할 것인가가 앞으로의 과제이다. 『제주 4·3 연구』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일독해 불만한 책이다.